

# P2P 연체율 급증에 ‘소비자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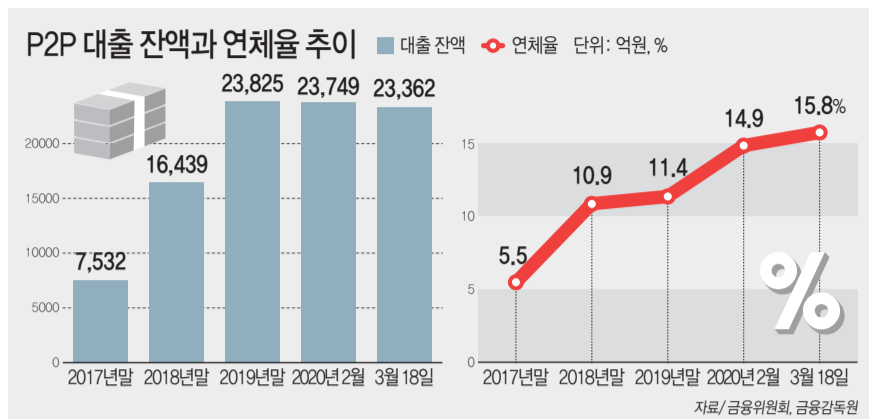
금융당국 “투자자 유의사항 숙지”  
P2P 연체 30일 이상 15.8% 달해  
부동산 대출서 연체율 2.9배 높아

금융당국이 P2P(개인간 거래)대출 투자에 ‘주의’ 단계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오는 8월 금융권 진입을 앞두고 P2P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사기 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P2P대출 연체율이 급증함에 따라 ‘주의’ 단계인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의 단계는 위험·경고·주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투자할때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투자하라는 의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 중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는 15.8%이다. 지난 2017년 5.5%인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4%, 지난 2월말 14.9%로 지속 상승했다.

특히 연체율은 부동산 대출(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2P금융협



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부동산대출상품만 취급하는 P2P업체 16개사의 평균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7.3%)에 비해 2.9배 높았다.

P2P대출 투자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2P선정 시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P2P금융협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율과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인터넷 투자카페 등을 활용해 상

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융위는 또 과도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를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리워드를 გადა 지급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전 투자자 점검항목을 통해 신중하게 투자해 달라”며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적극 실시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 수협 “코로나 타격 수산업, 정부지원 시급”

비대면 판매확대 예산지원 요청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방안 건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23일 정부에 제출했다.

임준택 회장은 건의문에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물 수요급감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단절, 어촌관광인구 전멸, 입국 제한에 따른 외국인력 부족 등으로 어촌경제가 고사 직전”이라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수협은 수산물 유통과 소비와 관련 최근 소비절벽으로 급감한 수요를 살리기 위해 수산물판매전용 스마트폰 앱 개발,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확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광어, 명게, 우럭, 민물장어, 굴 등 주요 양식수산물을 긴급수매하고 수산물 해외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각국 온라인쇼핑몰에 한

국수산물을 신설해 입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금융 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가와 수산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수산업 가공, 유통, 서비스 분야 등 연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협이 건의한 사항에는 어업인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과 금리 인하 등 지원책도 포함됐다.

어업인들에게 어선원 및 어선 보험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보험 가입 선박에 대한 1개월분의 유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요청했다.

/나누리 기자

# BNK, 빈대인·황윤철 나란히 1년 연임

〈부산은행장〉

〈경남은행장〉

조직안정, 경영 연속성 초점두고 연임  
업계 안팎 “경영시험대 아니냐” 분석  
디지털 혁신 통한 수익원 마련 집중



빈대인 부산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 2기 체제에 부산은행 빈대인 행장과 경남은행 황윤철 행장도 함께한다. 다만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경영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에 각각 1년 연임을 결정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김지완 회장이 연임하게 되면서 조직의 안정과 경영의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연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기기간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부산은행의 경우 1967년 초대은행장부터 13명을 거칠 동안 은행장의 임기는 3년이었다. 금융지주로 출범했던 2011년 이장호 행장은 2006

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지주회장과 부산은행장을 겸직했고, 이후 성세환 행장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장과 부산은행장을 맡았다. 각각 연임을 통해 3년간 임기가 늘어났지만 1년 임기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이 경영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통상 실적을 통해 연임여부를 판단한다. 향후 1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에 따라 김 회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설명이다.

현재 BNK금융그룹 당기순이익 중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BNK금융그룹의 은행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지난 2016년 89.9%에서 81.7%로 8.2%포인트 감소했다.

부산은행은 빈대인은행장이 취임한 2017년 20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후 2018년 3467억원, 2019년 3748억원을 달성했다. 경남은행은 황윤철 은행장은 취임한 2018년 169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이후 2019년 1817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1년간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통한 수익원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역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겹치면서 오프라인 영업이나,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원 모색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산·경남 은행장의 1년 연임기간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BNK금융그룹이 부산은행에서 나온 만큼 회장과 행장의 임기가 같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누리 기자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 ‘창립 30주년’ 신한생명, 리딩컴퍼니 도약

판매채널 다각화, 업계 첫 지점제  
고객중심, 가치경영, 디지털혁신

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신한생명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신한금융그룹의 전략인 일류신한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일류 리딩컴퍼니 도약을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한생명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와 디지털 시대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을 통한 영상 시청, 이벤트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신한생명은 1990년 3월 23일에 첫 영업개시를 시작으로 자산 34조의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후발 신생 보험사라는 불리한 여건을 딛고 남다른 성과를 이뤄왔다. 판매채널 다각화, 업계 최초 지점제 도입 등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포상 중 최고의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보험금지급능력 평가에서 1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경영안정

신한생명은 올해를 일류 리딩컴퍼니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험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과 직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이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자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고객중심, 가치경영, 디지털혁신 등의 경영방침과 지향점을 같이한다.

먼저 고객가치를 높이는 시장선도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객별 수요를 분석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채널별 특성을 감안한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재무건전성 기반의 자산운용 효율을 제고해 신 지급여력제도(K-ICS)와 지급여력(RBC)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 강화를 통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슈어 테크 기반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j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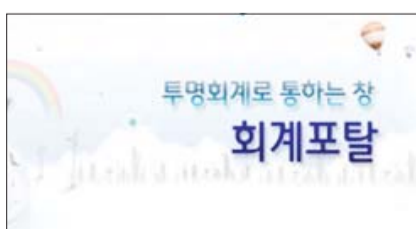
# 금융위 “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

앞으로 회계부정 신고시 이름을 밝히기 부담스러운 제보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감사인이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정요구 뒤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선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앞으로는 실명신고 부담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



앞으로는 회계부정신고시 익명으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금융위원회

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나누리 기자